

주간 통일정세

2015-21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위민크로스DMZ 행사 남한이 방해했다고 비난(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8일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이 비무장지대(DMZ)를 건너 북에서 남으로 온 ‘위민크로스DMZ’ 행사에 대해 “남한이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비난함.
 - 북한 ‘세계 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대답을 통해 “남조선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국제여성대행진을 ‘친북적’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대표단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헐뜯음.
 - 대변인은 “괴뢰패당은 대표단 성원들의 관문점 통과를 ‘유엔군 사령부 불허’를 구실로 가로막고 서해 육로로 받아들이고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극우보수깡패들을 내몰아 대표단을 ‘북 찬양단체’, ‘반미 친북단체’로 매도했다”고 주장함.

- 북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선전포고로 간주”(5/2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끝끝내 설치된다면 공공연한 대결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함.
 - 조평통은 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남한과 미국이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인권사무소 설치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해 써오던 상투적인 수법이며 침략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라며 “괴뢰역적 패당은 상전을 등에 업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하려 한다”고 헐뜯음.

- 북한, 안보리에 한미연합훈련 의제 상정 요청(5/29, 연합뉴스)
 - 28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안건으로 한 긴급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5일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박 대통령 방미 비난…“6·15행사에 재뿌려”(5/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8일 ‘6월의 미국 행각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5주년에 즈음한 시기에 방미하는 점을 지적하며 “6·15행사에 재를 뿌린다”고 비난함.
 - 논평은 그러면서 “굳이 이 때에 외세를, 그것도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인 미국을 찾아가는 것”을 “고칠 수 없는 해외도피 악습의 표현이라고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단순한 도피행각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걸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놀음이 될 것”이라고 비난함.
 - 또 박 대통령이 방미기간 “오바마의 품에 기여들어 장단을 맞추면서 반공화국 대결 치맛바람을 일궈 줄 것”이라며 온갖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맹비난함.

- 북한, 남한 국제공조 비난…“전쟁 불길 치솟을 것”(5/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국제공조로 차려질 것은 자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괴뢰패당이 반공화국 국제공조에 광분한다면 종당에는 조선 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피해는 우리 민족에게 들쭉날쭉할 것”이라고 위협함.
 - 신문은 또 “남조선 괴뢰들의 반민족적 국제공조의 종착점은 결국 북침핵전쟁 도발”이라며 “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강화 조치는 너무도 정정당당하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조선 매국역적들이 외세와 침략전쟁 공조에 피눈이 되어 날뿜수록 그에 대응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연평도 북쪽 갈도에 122mm 방사포 진지…“심각한 위협”(5/26, 연합뉴스)
 -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갈도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병커 형태의 5개의 유개화(덧개가 있는) 진지를 완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를 공격할 때 동원한 공격무기로 이 방사포의 로켓 포탄은 길이가 2.87m이고 탄약 1발의 중량은 66.3kg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한, SLBM 시험발사 동영상 공개…‘진위 여부’는 물음표(5/27, 우리민족끼리)
 -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이 27일 발사 시험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함.
 - 매체가 27일 게재한 ‘시사 카메라 초점:깨진 쪽박을 쓰고 날벼락을 막기’라는 제목의 2분4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물속 잠수함에서 거대한 탄도탄이 발사돼 수중으로 솟구치는 장면이 나옴.
 - 동영상은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에 따라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이 소용없게 됐다면서 ‘괌도와 하와이 앞바다에서 불의에 미 본토타격 가능’, ‘서울에 미사일 1-2발만 떨어져도 극도의 혼란상황이 조성’이라는 자막을 연이어 내보냄.
 - 또 탄도탄이 수중 발사되는 장면에는 “송아지 마냥 화들짝 놀라 초상난 집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괴뢰들의 소동을 놓고 내외 여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그래야 다 깨진 쪽박 쓰고 날벼락 맞기다”라는 육성도 넣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추진 비난(5/2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우리 공화국은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며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다니며 인권사무소 설치 놀음을 벌이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이어 “남조선은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마저 강탈당하는 참혹한 인권의 무덤, 민주의 동토대”라며 오히려 남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함.
 - 매체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추진이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에 도전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코 남조선 땅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북남관계에 미치는 파국적 후과(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위협함.

- 만월대 발굴·남북중단철도 시야…남북교류활성화 기대 ‘술술’(5/31, 연합뉴스)
 - 남북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개성 만월대(고려 궁성)를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함.
 -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사업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화재청의 관계자 등 남측 인사 80여명이 개성을 방문하며, 통일부는 이 사업을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뉴스는 전함.

- 【국방위 정책국 성명(5.24)】 5·24조치 5주년을 맞아 ‘5·24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 △천안함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 △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5·24조치 철폐에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통령이 있다’고 5·24조치 해제 주장(5.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근 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 발언을 비난하며 이산가족들이 못 만나고 있는 것은 “괴뢰패당의 반민족적 망동 때문”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이산가족상봉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은 최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고 주장(5.24,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北 인권’ 발언 관련 최근 ‘세월호 추모집회’ 진압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통치가 살판 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파쇼암흑사회’라고 비난(5.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美 국무장관 회담(5.18, 서울)에 대해 “우리(北)와 엿서보려는 것은 맨발로 바위 차는 격의 부질없는 망동”으로 “적들이 그 어디에 있건 마음먹은 대로 일격에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SLBM 실험성공 강조’ 위협(5.25,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당국의 5·24 조치는 ‘反北·반민족·반통일적 대결조치’라고 비난 및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철회 촉구(5.25, 중앙방송)
- ‘5·24조치’ 관련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을 두고 대화도 협력도 있을 수 없다’며 ‘5·24조치는 동족대결정책의 필연적 발로로서 남북관계를 완전폐쇄상태에 몰아넣은 요인’이라고 비난 및 ‘전면 철폐’ 재차 주장(5.26,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SLBM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발언 관련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험악한 파국으로 몰아가는 고의적인 도발소동’이라며 ‘외세와 벌리고 있는 군사적 책동을 정당화하고 북침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것’이라고 왜곡 주장(5.26, 중앙통신·노동신문)
- SLBM에 대한 ‘北 위협설’ 등 발언 관련 ‘공포에 질린 패배자들의 가소로운 낫두리’라며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에 도전하는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5.26,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국통일연구원, ‘천추에 용납 못할 박OO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며 백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에 대해 ‘희세의 악녀’·‘식민지 총견’·‘추악한 미국위안부’ 등으로 대통령 실명 맹비난(5.27, 중앙통신)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北 SLBM’ 관련 발언(심각한 위협, 도발 등)에 대해 “얼빠진 수작”이라고 비난하고 ‘우리(北)는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5.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우리 정부의 5·24 조치 입장 표명(남북대화 재개시 5·24 조치문제 논의 등)에 대해 “5·24 조치 해제와 북남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내외 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라며 ‘5·24 조치 해제’ 지속 주장(5.28, 평양방송)
- 【「조평통」 대변인 담화(5.29)】 ‘러시아 잠수함과 北어선·경비정 동해안서 충돌’ 보도 관련 ‘충돌사건 자체가 없었고 청진수산협동조합이나 679호 경비함도 있어 본적이 없다’며 ‘박OO패당과 보수언론사는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5.29,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北 SLBM’ 관련 국제공조 강화 움직임에 대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민족반역행위’라며 ‘우리(北)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위적 핵억제력을 튼튼히 틀어쥐고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초강경대응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위협(5.30,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美 하원대표단 접견(5.28)시 발언(한미 동맹 더욱 공고, 北 위협 대비 연합방위력 강화 등) 관련 “불쌍사나운 추태”라며 ‘선임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외세의존의 더러운 악습부터 버려야 한다’고 비난(5.30,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당국의 ‘남북대화’ 거론은 ‘정세파국의 책임을 北에 넘겨씌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며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기회를 차버린 괴뢰패당은 대화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책임 전가(5.31,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언론의 ‘北경비정·어선의 러시아 잠수함과 충돌사고 은폐’ 보도를 “날조보도”라며 이는 ‘反北 소동으로 불순한 목적 실현을 위한 박OO 일당의 계책과 추동에 따른 것’이라고 왜곡 비난(5.31,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북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추진을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북침전쟁 도발의 구실마련 속심”으로 “우리(北) 체제를 혈돋으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속 반발(5.31, 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비핵화 망쳐…때는 늦었다”(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31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최근 남조선, 일본과 함께 벌여놓은 3자협의회 마당에서 마치 저들은 대화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오도하려 시도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은 “우리가 합동군사연습 임시중지 대 핵시험 임시중지를 제안했을 때 대화조차 거부하고 군사연습 강행으로 대답한 것이 미국”이라며 “대조선 정책 실패라는 비난세례를 받자 대화가 재개되지 못한 것이 우리 탓인 것처럼 흑백을 전도하려 한다”고 책임을 돌림.
 - 외무성은 이어 “초보적인 신뢰조차 결여되고 상호불신과 적의만이 뿌리깊은 조미 사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며 핵무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외무성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은 누구를 위협공갈하려는 수단이나 무엇과 바꾸기 위한 흥정물이 아니며 무엇과 바꾸어먹기 위한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60돌 맞은 조선총련 띄우기…“공화국의 자랑”(5/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1면 가장 위에 실린 ‘주체의 기치 따라 전진하는 총련의 애국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총련을 “공화국의 자랑이고 민족의 영예”라고 치켜세움.
 - 신문은 “주체의 산아, 세계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로 그 이름 높은 총련은 지난 60년간 부닥치는 모진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국과 민족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다”고 강조함.
 - 신문은 조선총련의 60년 역사가 김일성과 김정일 등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영도로 꾸려졌으며 “총련은 민족적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였고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발전과 조국 통일을 위해 적극 헌신했다”고 평가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20년째 미국무부 지정 ‘대테러 비협력국’(5/29, 미국의소리)
 -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는 5월 11일자 연방관보에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 의회에 통보했다고 공시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조선총련 60주년 기념식…김정은 “끝까지 보살핀다”(5/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조선총련 결성 60주년 중앙보고회와 기념 연회를 열었다고 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 “총련은 지난 60년 기간 영광스러운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과 민족 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다”고 치하했고 “동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차별 조치들과 비인도주의적인 행위”에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보살필 것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함.

- 25일 행사에는 양형섭 부위원장 외에도 김양건 노동당 비서,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배익주 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이에 앞서 조선총련은 지난 23일 도쿄 조선회관에서 허종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 60주년 축하 연회를 개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사. 대러시아

- 러 외무차관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 아직 안 보여”(5/27, 리아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은 26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우리는 현재 회담 참가국 모두와 아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회담 재개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징후도 없다”고 설명함.
 - 모르굴로프 차관은 26일 앞서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를 접견하고 러-북 양자 관계, 한반도 상황, 몇몇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아. 국제기구

- 유엔, 北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제재위반 조사착수(5/29, 연합뉴스)
 -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자. 기타 국가

- 이란 반정부단체 “北 핵·미사일 전문가, 4월에 이란 방문”(5/28, 연합뉴스)
 - 파리에 본부를 둔 이란 반정부 단체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I)’는 28일(현지시간)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 대표단 7명이 4월 말에 이란에 입국해 군사 시설을 방문, 핵무기 관련 기관과 접촉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핵, 핵탄두 전문가, 유도 시스템 등 탄도 미사일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포함한 인민무력부 소속 7명의 북한 대표단은 이란 국방부가 관할하는 수도 테헤란 동부의 ‘이맘 호메이니 단지’를 비밀리에 방문해 안보혁신연구기구(SPND)의 산하 기관으로 핵탄두 내부 연구와 생산을 맡고 있는 신항공우주기술연구 설계센터(CRDNAT)와 접촉했다고 NCRI는 주장함.

 - 홍콩회사 “북한 남포지구 개발 참여…회토류·금관에도 투자”(5/29, 내나라)
 - 북한의 대외용 포털사이트 ‘내나라’가 29일 게재한 ‘중국 홍콩글로벌 실업투자집단유한공사’의 호등 총경리의 글에 따르면, “우리 공사는 조선에서 국가적 대상으로 되어 있는 남포지구 보세가공수출지대 개발과 화력발전소, 200개의 분체식 태양열 발전소 대상에 대한 독자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회토류 광산과 대규모 금광 개발 대상에도 적극 참가하려고 한다”고 밝힘.
- 「총련」 결성(5.25) 60주년을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 업적을 칭송하고 ‘김정은이 있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수령님들의 유훈을 추켜들고 오직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5.24, 중앙통신)
 - 北, ‘미국은 이미 성능이 향상되고 기술적으로 보다 정교화된 각종 핵무기들의 탄두 생산계획을 완성하거나 생산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핵전파와 군비경쟁을 산생시키는 주범’이라고 비난(5.24, 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내각의 ‘안보보장관련법’ 개정안 승인은 “군국주의 재침야망에 환장이 된 자들의 망동”이라며 “만일 일본이 이대로 계속 나가면 나라는 파멸될 것”이라고 경고(5.25,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보건 대표단(단장 : 강하국 보건상,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세계보건기구 총회 제68차 회의 참가)에서 귀환(5.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자유민주당 대표단(단장 : '이완 아브라모프' 국가회의 지역정책·북방 및 원동문제추진 위원), 5월 25일 평양 도착(5.25, 중앙통신·평양방송)
- 러시아 에너지 및 안전센터 대표단, 5월 25일 귀국(5.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오만 외무성 대표단(단장 : '아흐마드 빈 유시프 오바이드 알 하르시' 외교차관)·베트남 사회과학원 대표단(단장 : '보 카잉 빙' 부원장), 5월 25일 각각 평양 도착(5.2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유엔아동기금 기초협정 체결 및 기구활동 정식 참가('85. 5.25)' 즈음 '기금의 협조로 5살미만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활동 전개' 등 전언(5.25, 중앙통신)
- 베트남공산당 대표단(단장: 레 휴 응이아 黨중앙이론이사회 부위원장), 5월 26일 귀국(5.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킨 첫째가는 주범이며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의 비호밑에 한반도 핵문제를 더욱 첨예화시킨 범죄자들'이라며 '미국과 괴뢰들은 핵피고석에 앉아 역사와 인류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5.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케리 美 국무장관의 발언(남한에 北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드 배치해야 함.)과 주한미군의 사드 후보지 비공식 조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책동이 논의단계를 벗어나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北)는 이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5.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 7곳 등을 포함한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과거범죄 증거물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극악한 모독행위'라고 비난(5.27,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 고위정책 등 '북핵 대화' 언급('비핵화 의지가 없는 北과 대화는 의미가 없음' 등)에 대해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중대사를 망쳐먹은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비열한자들의 잔꾀"라고 비난 및 '핵포기 不可·병진노선 고수' 강조(5.28, 중앙통신·민주조선)
- 독일조선의원단 위원장(하르트문트 코시크) 일행, 5월 28일 평양 도착(5.2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도발 및 위협' 발언 관련 '반세기 이상의 장구한 세월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범죄적 책동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양키식 기준에 준하고 있다'며 재차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주장(5.2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日 방위상(나카타니)의 '美軍을 도와 北 미사일기지 선제공격' 발언 관련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놓은 일본은 지나친 과신에 빠져있다'며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조소(5.29,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독일 친선의원단 위원장 회담, 5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5.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이탈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과 일행, 5월 29일 평양 도착(5.29, 중앙통신)
- 러시아 자유민주당 대표단·베트남 사회과학원 대표단, 5월 29일 귀국(5.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北 도발 억제 위해 남한에 사드를 배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책동'이라며 '우리(北)를 선제타격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조건에서 그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5.30, 중앙통신 논평)
- 2015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 참가 대표단들, 5월 30일 귀국(5.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결성 60주년 재일본조선인감사단(단장 : 배익주 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5월 30일 평양 출발(5.30,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 잡지 <포린 폴리시>의 'CIA, 정보기관에서 살인기계로 형질전환' 특집기사 관련 "CIA는 악의 제국-미국의 산아이며 세계최대의 범죄국가로서의 미국의 축도"라고 주장(5.31, 중앙통신·민주조선)
- 「5월의 국제정세」는 '△北 SLBM 시험(5.9) 파장, △일본의 해외침략 야망실현 책동(미일방위 협력지침 개정), △미국의 인권유린실태 심의(5.11, 유엔인권이사회 제22차 회의)' 등 이라며 "국제반동세력 고립 약화" 주장(5.31, 중앙방송·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SLBM 수중발사 참여 과학자들 치하(5/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간부들을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불러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탄도탄 수중발사 기술을 완성하게 된 것은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또 하나의 역사적 사변"이라면서 "노동당 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관계자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함.
 - 이번 기념사진 촬영에는 김춘섭 당 군수담당 비서,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이 참가함.
- 북한 김정은 "새 출발한 청년들 모두 안아주고 싶다"(5/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개최를 도운 당 조직과 청년동맹조직들에 감사문을 보내 청년 교육과 청년정신 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통신은 2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감사문에서 "강성국가 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위훈 떨치고 있는 조선청년들의 혁명적 품모와 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했다"고 치하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대회에 모범적 청년들 외에도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한 청년들도 참가하였는데 나는 그들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여 모두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앞으로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배출하는 모범 단위들을 찾아가 직접 만나 격려해주겠다는 뜻을 밝히며 청년동맹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을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까지 완공하라고 주문함.

- '출산설' 북한 김여정 47일 만에 공개석상 등장(5/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에서 새로 건설 중인 종합양묘장을 시찰했다고 전하면서 김여정 당 부부장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리재일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과 함께 수행원으로 거론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전길수 철도상, 국제철도협력기구 참석차 몽골행(5/30, 조선중앙통신)

- 전길수 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철도성대표단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몽골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北,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에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인간사랑의 화원이고 행복의 보금자리,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고 호도(5.25, 중앙통신·노동신문)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5월 25일 베트남 공산당 대표단(5.21, 訪北)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5.25, 중앙통신)
- 김영남, 5월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덴마크대사 신임장 접수 및 담화(5.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오만 외무성대표단, 5월 26일 만경대 방문 및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능라곱등어관 등을 참관(5.2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 5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 주북 스리랑카 대사(바레스투 구루게 란지트 우안고다) 신임장 접수 및 담화(5.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5월 27일 신임 주북 스리랑카 대사와 담화(5.27,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숙천군 백암농장 등) 농장들 영농실태 현지 요해 및 “물과 자재, 비료를 원만히 대주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 협의(5.28,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5월 28일 오만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5.28, 중앙통신)
- 양형섭, 5월 29일 오만 외무성 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5.29, 중앙통신)
- 김영남, 5월 29일 총련 결성 60돌 재일본조선인감사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5.29,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철도성대표단(단장 : 전길수 철도상), 5월 30일 ‘철도협조기구 제43차 상회의(몽골)’에 참가차 평양 출발(5.30,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기뭄 비상 북한, 곡물 농사 ‘총력 투쟁’ 나서(5/28,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전체 6개 지면 중 3개 면을 농사에 관한 기사와 논평으로 채우고 지역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등 주민들과 간부들을 상대로 차질없는 농사임무 완수를 재촉함.
 -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는 ‘6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 강냉이

농사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의 땅속 습도가 지난해보다 1~3% 낮을 것이라며 “벼 모판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라”고 주문함.

- 이어 수량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도 “모살이율을 무조건 100%로 보장하여야 한다”면서 가뭄이 지속하는 조건에서도 모판 숨기, 잎 자르기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요구하면서 6월 초순까지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작물의 종자를 미리 키워놓아 벼모가 말라죽으면 곧장 옮겨심으라고 조언함.
- 신문은 ‘불멸의 영도업적을 빛내이며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신심 드높이 나아간다’는 기사에서는 양강도 대흥단군의 감자농장이 지난 16일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피해가 막심했다고 전하며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 노력을 부각함.
- 신문은 황해남도의 가뭄피해 극복 노력에 대해서도 재령군, 안악군, 은률군 등 지역별 노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도의 간부들과 주민들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고 있다”고 선전함.

다. 경제 상황

- 유엔 “영양부족 겪는 북한 주민 1천만명 넘어”(5/28, 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28일 공동으로 발표한 ‘2015 세계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14~2016년 영양결핍 상태를 겪는 북한 주민의 수가 1천5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는 북한 전체 주민의 41.6%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비율은 보고서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아시아 3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영양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은 지난 1990~1992년 480만 명, 2000~2002년 870만 명, 2005~2007년 850만 명, 2010~2012년 1천30만 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함.
- 유엔 “북한, 가뭄으로 올해 기아 사태 올 수도”(5/30, 연합뉴스)
 - 30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유엔의 북한 상주조정관 굴람 이사크자이는 30일 인터뷰를 통해 “가뭄이 올해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이사크자이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강수량은 최근 30년 동안 가장 적었고,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도 40~60% 가량 낮은 수준이며,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도 가뭄이 이어질 경우 내년도 식량 사정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그는 “지금은 쌀농사 계절이지만 심한 가뭄 탓에 북한의 농민들이 (쌀 대신) 물을 덜 사용하는 옥수수로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세계적 관광지”(5/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가 27일 금강산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윤영석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대는 오래지 않아 세계적인 관광중심지로, 경제문화 교류의 활무대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화국 정부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짧은 기간에 개발하기 위해 총 계획을 전망성 있게 세우고 그에 따라 지구별 세부 계획들을 완성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 통신은 설명회에 세계해외조선인무역협회 대련(다롄)지회대표단, 중국 료녕(랴오닝)복사달집단유한공사대표단, 중국 료녕성호북상회대표단, 료녕동북아 경제문화축진회대표단, 중국 홍콩글로벌실업투자집단유한공사대표단, 스웨덴 등 외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함.
- 미국 구호단체, 북한에 옥수수과 밀곡수 70t 지원(5/27, 미국의소리)
 -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한국 교민들이 만든 대북 지원단체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윤유중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단체가 지난 3~5월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60t과 밀곡수 10t을 지원했다고 밝힘.
 - 윤 대표는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강원도 원산과 문천의 병원, 중등학교, 애육원 등을 방문해 식량이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함.

- 중국 선양-평양 직행 관광열차 27일 개통(5/28, 신화통신)
 -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선양철도국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성도인 선양(沈陽)과 북한 평양을 잇는 직행 관광열차가 27일 밤 오후 10시30분(현지시간) 선양을 출발했다고 밝힘.
 - 6일 일정으로 짜인 열차관광 비용은 3천 위안(약 53만 원)으로 관광객들은 이 열차를 타고 먼저 북중 접경도시인 단둥(丹東)에 도착한 뒤 국제연계운송열차로 환승해 다시 압록강 연안의 신의주, 평양으로 향하며 28일 오후에는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보도함.

- 국제적십자, 북한에 1억원 상당의 식품가공기계 지원(5/28, 미국의소리)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북한 평안도에 9만 달러(9천900만원) 상당의 탈곡기와 도정기 등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전함.
 - IFRC는 최근 공개한 '2014 연례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북한에 탈곡기를 포함한 식품가공기계 6세트를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모두 9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 남포사범대학 졸업생 20여명 등 수천명의 건설장 탄원과 전당적·전국가적·전사회적 지원사업 전개 등 '北,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전력지원' 소개(5.25, 중앙통신)
- 각지 수천 명의 청년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 지원(5.26, 중앙방송)
- 철도성·평안남도 등 성·중앙기관 및 각 도들의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장 지원(건설자재·후방물자 전달 등) 보도(5.28, 중앙통신)
- 평양메기공장(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장성)의 첫물메기, 5월 28일 평양의 학원들과 육아원·애육원·양로원에 공급(5.28, 중앙통신)
- 원산제염소 소금생산자들, 5월 24일까지 올해 연간 소금생산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5.29, 평양방송)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건공사 마감단계 추진 및 개천철도국·함흥철도국의 5월 28일 현재 영농물자 수송계획 174.6%·164.5% 수행 등 각지 철도수송 일꾼들의 증송 투쟁 보도(5.31, 평양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도 금연 정책...담배 가격인상·수입금지(5/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 보건성 책임부원 최현숙은 30일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기간 조선에서 금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위한 다분야 협력 활동에서 성과가 이룩됐다” 며 이같이 밝힘.
 - 최 씨는 이어 “다른 나라에서 유행한 대용 담배인 전자담배, 무연담배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며 “교육기관, 보건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담배 통제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위생선전 활동도 진행됐다” 고 전함.
 - 그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2009년 50.3%였던 남성 흡연율이 작년에는 43.9%로 감소했으며, 여성 흡연자는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함.

- **북한, 산불방지 소홀지역 간부들 질타...“뼈 깎고 피 바쳐야”(5/30,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31일 ‘자기 단위 사업을 책임지는 자세와 입장이 중요하다’ 는 제목의 논평에서 함경남도 요덕군·허천군, 함흥시 회상구역 등을 거론하며 산불방지에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일부 시, 군들” 이 있다고 전함.
 - 이어 요덕군은 산림지역 감시, 통보, 군중동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속수무책’ 으로 날을 보낸 결과 “산불이 발생한 것도 모르고 있었고 제때에 끄지 못해 일부 면적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고 비난함.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간부들이 주민 동원작업을 형식적으로 했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당정책 결사 관철의 정신이 얼마나 투철하며 애국심의 열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심각히 반성해보아야 할 것” 이라고 촉구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사이트 개설...선박·인명 검색 가능(5/26, 연합뉴스)
 - 26일 연합뉴스는 해상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이 최근 자국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 인터넷 홈페이지(www.ma.gov.kp)를 개설했다고 보도함.
 - 한글과 영어 등 두 가지 언어 버전으로 제작된 사이트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된 선박 등록번호나 명칭을 토대로 북한의 선박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선원의 이름을 근거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자격 및 훈련 내역도 알아볼 수도 있음.
 - 사이트에는 아울러 해사법과 관련한 자료와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동향 자료도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소속 근로자들과 해양 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도 올라와 있음.
- 북한, 작년 국제특허 출원 4건...남한의 0.03% 수준(5/27, 자유아시아방송)
 - 2014년 북한이 4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인용해 보도함.
 - WIPO의 국가별 국제특허 출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납 건전지를 비롯해 모두 4건(추정치)의 국제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는 WIPO가 집계한 136개국 가운데 100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같은 기간 남한(1만3천151건)의 0.03% 수준임.
 -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한해 평균 2~3건에 불과해 매달 평균 1천200건을

출원하는 한국과 격차가 크다고 RFA는 전함.

- 북한 사회 마약문제 ‘심각’...“중학생까지 마약”(5/29, 북한인민해방전선)
 - 북한인민해방전선은 29일 “북한에서 최근에는 중학교 학생들까지 마약을 소지하는가 하면, 결혼식 부조금, 대학 입학, 승진 뇌물로도 마약을 선물할 정도로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탈북자 A씨의 증언을 전함.
 - A씨는 탈북하기 전 북한 노동당 연락소 해외파견소에서 근무하면서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진행한 마약 생산과 판매 과정을 목격했다고 주장함.
 - A씨는 “1990년대 초 김정일이 국제적 압력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붕괴, 각종 정치적 목적의 내부 행사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마약 생산을 비밀리에 진행하라는 지시를 중앙당에 내렸다”고 증언함.
 -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의 지시 이후 북한 당국은 군 내부에 ‘백도라지’ (아편)를 재배하는 부대를 조직한 뒤 완성된 마약을 해외에 팔거나 계획적으로 시중에 흘려 외화벌이 단위들이 자발적으로 밀매에 나서도록 함.
 - 북한 당국이 만든 마약은 ‘백도라지’뿐 아니라 진통진정제 역할을 하며 일명 ‘총탄’으로 불리는 화학합성제 ‘덴다’, 각성제 ‘얼음’, 강심지혈제 ‘파인디아’ 등 여러 종류라고 A씨는 전함.
 - 북한에서는 열악한 의료 상황으로 주민들이 진통제 등을 대신해 마약을 복용하거나 개별 기관들이 각종 마약을 생산·판매해 식량 구입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공공연하게 마약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북한 군악대, 러시아 극동 국제 군악축제 참가(5/29, 인테르팍스통신)
 - 북한 군악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군악 축제에 참가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북한 군악대를 이끄는 리은식 대령은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북-러 친선의 해로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페스티벌에 참가해 양국 우의를 다지라고 지시했다”면서 “김 제1위원장이 페스티벌 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힘.

- 北 원은경 선수, '2015년 세계청소년 및 청년여자권투선수권대회'(대만) 청소년 46kg급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5.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축구팀,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 14살미만 소년지역별선수권대회(동아시아지역)'에서 우승(5.25, 중앙통신)
- 北 내각, 규격화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 '규격법' 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 발표(5.26, 중앙통신)
- 北 여자권투선수들, 5월 26일 대만에서 열린 2015년 세계청소년 및 청년여자권투선수권대회 참가 후 귀환(5.26,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수리해양과학분원, '조·수력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5.27, 중앙통신)
- 평양시(3,000여개 교실 다기능화) 등 전국적으로 '수백동의 교사건설·증축공사 완공으로 수천개 교실 증가, 1만여개 교실 다기능화' 등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선전(5.28,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5월 29일 '장정화'(남포시 천리마구역 사회급양관리소 청년동맹원)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 수여(5.29, 중앙통신)
- 北, 5월 27일 '세계 금연의 날(5.31)'을 즈음하여 담배 통제를 위한 다분야토론회 진행(5.30, 중앙통신)
- 환경과학기술연구원,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개발(5.30, 중앙통신)
- 김일성 저작(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발표(5.31) 29주년 즈음 '김일성·김정일의 주체형의 혁명적 당건설' 칭송 및 '김정은의 영도로 노동당은 필승불패'라고 주장(5.31, 중앙통신·노동신문)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일, 北압박·제재 강화키로…“구체 수단 논의”(5/27, 연합뉴스)
 -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3자 회동을 했으며 북한의 인권사항과 SLBM 시험발사 등을 고리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됨.
 - 최근 북한의 계속된 대남위협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핵 능력의 다중화 및 고도화를 시도하는 한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내부 유동성이 커졌다는 정세판단에 3국이 인식을 같이한 결과임.
 - 황 본부장과 성 김 특별대표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할 예정임.

- 북핵 5자 협의, “대화로 북핵 해결”…대북 압박엔 이견(5/28,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당국자들이 도쿄에서 비공식 협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함.
 - 각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나머지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대북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알려짐.
 - 다만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6자회담 틀에 복귀시키는 방법론과 관련, 한·미·일 당국자들이 전날 수석대표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만 중국·러시아 측은 ‘압박’, ‘제재 강화’ 등을 가급적 거론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북한 제외한 북핵문제 답합 용납하지 않을 것”(5/28, 연합뉴스)
 -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한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의 땀 수 있는 한 참여자”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등 뒤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어떤 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NEACD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국방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매년 개최하는 다자간 안보 대화체임.
 - 그는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과의 대화가 지속되길 원하며 최종 심판자로서의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함.
 - 로그비노프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미국, 일본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전날 서울에서 회동해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이며, 이러한 발언에는 한미일 3국이 답합해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상황을 러시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김.
 -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서 한미일과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면서 앞으로 북핵 협상이 한미일 3국의 기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한미일 ‘대북제재 강화’ 한 목소리…中 ‘대화’에 방점(5/29, 연합뉴스)
 - 최근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동시 방중’해 중국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대북 압박·제재 강화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한미일 협의에 이어 중국과도 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양국은 시급성을 갖고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시켜야 한하는데 공감했다”고 전함.

- 한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억지, 북핵능력 고도화 둔화를 위한 제재 이행, 대화 복귀 유도, 억지·압박·대화라는 세 개의 축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함.
 - 중국은 이런 입장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나름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고,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으로 해석됨.
 -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중 접촉에서 중국의 기본적 태도가 바뀌었다고 할 만한 건 없다고 말했으며,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미일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미 하원 전략소위 위원장, “괌 사드포대, 영구배치” 시사(5/30, 연합뉴스)
- 2013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령 괌에 한시로 배치했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영구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한 중인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소위 위원장은 금주 초 괌의 앤더슨 공군기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를 괌에 영구 배치하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함.
 -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기동군 ‘탈런(Talon)’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부대이며, 미국은 2013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BM-25)의 공격 가능성이 대두되자 첫 번째 포대인 탈런을 긴급 배치하였는데, 이는 사드 포대가 일단 작전현장에 배치될 경우 영구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됨.
 - 한 외교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사드 포대를 영구 배치한다는 것은 관련 장비를 지하에 완전히 고정하는 형태와 트럭에 실어 이동하는 형태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美, 北핵시설에 ‘스턱스넷’ 사이버공격 시도했다 실패(5/30, 연합뉴스)
- 미국이 과거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데 활용한 사이버 무기인 ‘스턱스넷(stuxnet)’과 유사한 컴퓨터 바이러스로 북한 핵시설에도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스턱스넷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2010년에 북한 핵시설도 공격하기 위해 한글로 설정된 컴퓨터에서 활성화되는 유사 바이러스도 함께 개발했으나 북한의 통신체계가 매우 폐쇄적인 탓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해 공격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턱스넷은 2010년 처음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로, 공항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코드이며, 주로 USB 저장장치로 옮겨지며 특정 조건을 갖춘 컴퓨터와 네트워크만 공격해 한순간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사이버 무기임.

나. 미·북 관계

- 미국, '방사포 진지 구축' 북한에 긴장고조 자제 촉구(5/27,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 연평도 앞 무인도인 갈도에 122mm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함.
 -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다고 공식 확인했으나,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짐.
- 북한, 20년째 미국무부 지정 '대테러 비협력국'(5/29, 연합뉴스)
 - 북한이 20년째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과는 별도로 지정하는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 금지대상임.
 -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는 해제됐으나, 대테러 비협력국으로는 1995년 첫 지정된 후 20년째 명단에 포함됐으며,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소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핵탄두 소형화 주장 등이 이어지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북일 스톡홀름 합의 1년…긴 살바싸움에 불신만 쌓여(5/26,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합의(스톡홀름 합의)를 한 지 1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북측에서 어떤 조사 결과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놓을 결과물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이 문제의 본질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납치 문제의 중대성, 통제사회인 북한의 특성에 비춰 북한은 이미 ‘조사 결과’를 손에 쥔 채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인 제재 해제 등 ‘대가’를 협상하려 한다는 관측이 있음.
 - 일본은 북한이 조사 종결 시한으로 거론한 7월이 지나면 1년 전 해제한 일부 제재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日경찰, “北노동당 39호실 송이수출 관여 입증문서 확보”(5/27, 연합뉴스)
 - 일본 경찰이 북한산 송이 불법수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 최고 지도부의 통치 자금 관리조직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일본 경찰은 작년 5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의 차남인 허정도씨 집에서 압수한 문서에 노동당 39호실이 ‘조선특산물판매’라는 회사를 북한산 송이의 수취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전함.
 - 일본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수출입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조선특산물판매’는 2010년 9월 북한에서 송이 약 1천800kg을 수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남.

마. 러·북 관계

- 러시아-북한 외교 당국자, 한반도 문제 등 논의(5/26, 연합뉴스)
 -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 담당 차관이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접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외무부는 또한 언론 보도문을 통해 “면담에선 (러-북) 양자 관계, 한반도 상황, 몇몇 국제 현안 등이 논의됐다”고 소개함.
 - 현지 전문가들은 이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불참함으로써 생겨난 양국 간의 외교적 앙금을 해소하고 향후 긴밀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가 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함.

- 러 외무차관,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 아직 안 보여”(5/27, 연합뉴스)
 -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우리는 현재 회담 참가국 모두와 아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회담 재개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징후도 없다”고 설명함.
 - 모르굴로프 차관은 앞서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를 접견하고 러-북 양자 관계, 한반도 상황, 몇몇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으며, 이 자리에선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북한 군악대, 러시아 극동 국제 군악축제 참가(5/29, 연합뉴스)
 - 북한 군악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군악 축제에 참가함.
 - 북한 군악대를 이끄는 리은식 대령은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북-러 친선의 해로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페스티벌에 참가해 양국 우의를 다지라고 지시했다”면서 “김 제1위원장이 페스티벌 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힘.
 -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하바롭스크 군악 페스티벌 ‘아무르의 물결’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된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맞아 예년보다 성대하게 준비된 올해 페스티벌에는 15개국 군악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바. 기타

- 북한 AIIB 가입,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 가능성(5/27, 연합뉴스)
 -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WB) 부총재는 26일(현지시간)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AIIB의 북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발 지원이 북한의 개혁과 더불어 동북아 안보 강화를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는 북한이 오픈서버 자격으로 AIIB에서(인프라개발) 업무처리를 배움으로써 AIIB를 통한 국제사회의 점진적인 관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로는 AIIB에서 북한이 인프라 개발 사업을 준비하도록 돕거나 소규모 개발 사업을 지원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남한 역시 북한과 AIIB의 관계 강화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점진적인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유엔, 北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제재위반 조사 착수(5/29, 연합뉴스)
 -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미국, 영국 등은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이 명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일부 서방은 이날 안건이 아닌 ‘북한 인권문제’를 재론해 강력한 제재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짐.
 -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유엔이 수중발사 시험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임.

- 북한, 안보리에 한미연합훈련 의제 상정 요청(5/29, 연합뉴스)
 -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안건으로 한 긴급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5일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는데, 앞으로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사국이 있으면 우선 안전 상정 필요성을 이사국들이 논의하게 되며, 요청이 없을 시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북한은 작년에도 두 차례 한미 연합훈련을 안보리 의제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번 모두 다뤄지지 않았음.

■ 유엔, “북한, 가뭄으로 올해 기아 사태 올 수도”(5/30, 연합뉴스)

- 올해 북한이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유엔의 경고가 나왔는데, 유엔의 북한 상주조정관 굴람 이사크자이는 인터뷰를 통해 “가뭄이 올해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는 이어 “또 다른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 또는 기아와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함.
- 이사크자이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강수량은 최근 30년 동안 가장 적었고,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도 40~60% 가량 낮은 수준인데,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도 가뭄이 이어질 경우 내년도 식량 사정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그러나 북한 정권이 핵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반발해 인도적 지원조차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사크자이는 “원조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지 말자”며 “북한은 식량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아마도 인도, 중국, 러시아에 손을 벌릴 것으로 본다”고 밝힘.
- 북한 당국도 최근 법 규정을 고쳐 가족 단위의 소규모 농장 운영을 허용하고, 온실 2만개 건설사업에 착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 중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박근혜 대통령, “한미동맹 공고”...美하원대표단, “방미성공 지원”(5/28,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와 방의비 분담금 협정, 원자력

협정 타결을 높이 평가함.

- 박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확고한 초당적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며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미 하원 대표단은 지지를 표명함.
-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미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조항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에 기여한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 사드 한국이 결정할일…필요시 美준비, 의회도 지지(5/29, 연합뉴스)

- 미국 하원대표단의 일환으로 방한 중인 마이크 로저스(공화당)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장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관련해 “북한이 이미 완료했는지 모른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근거는 언급하지 않음.
- 로저스 위원장은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함.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개인적 생각이라며 “그것이 필요하다면 미국 정부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고, 미 의회도 그것(한반도 배치)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함.
- 동행한 민주당 소속 짐 쿠퍼 의원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충분히 제어했다면 (한반도에서) 사드가 전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매케인 의원, “사드 한반도 배치, 北위협 정보 따라 검토”(5/30, 연합뉴스)

-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최신 정보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며 이에 관한 미국 내부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을 시사 함.
-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질문에 “사드는 매우 효과적이고 뛰어난 역지력을 갖고 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북한이 이룬 (군사적) 발전에 관한 최신 정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룬

군사적 발전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과 핵무기 소형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 이어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결정에 앞서 당장은 의회 청문회가 필요하며 대통령, 국방장관과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드의 미국 정부 내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고함.

■ 한미일, 연쇄 국방장관 회담으로 3각공조 강화(5/30,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양자, 3자 회담을 잇달아 열어 민감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함.
- 3국 장관들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3국이 작년 말 대북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정보공유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은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함.
- 한미일 3국 국방장관들은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에 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갈등의 불씨를 없애는 데 주력하였는데, 특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도출됨.

나. 한·중 관계

■ 한중 국회,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 공동문건 추진(5/29, 연합뉴스)

- 한·중 양국의 국회가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 공동문건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방중 당시 종전 및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의회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자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이 공감을 표시한 바 있음.

- 양국 국회가 공식적으로 공동문건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동문건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내달 11~13일 장 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큼.
- 문건에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필요성 등의 내용과 함께 최근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 행보,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됨.

■ 중국군 부총참모장,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5/31, 연합뉴스)

-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에서 가진 한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함.
- 쑨젠궈 부총참모장의 발언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 요청을 하면 우리 정부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임.
-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중국 정부의 간섭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임.
- 이번 회담에서 쑨 부총참모장이 사드 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은 최근 한미 양국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는 양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착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다. 한·일 관계

■ 박근혜 대통령, “한국과 ADB, 향후 출범 AIIB 협력해야”(5/2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ADB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대일외교의 ‘정경분리’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교육·보건·위생 등 개발수요 확대에 대비해 한국과 ADB, 그리고 향후 출범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상호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박 대통령은 또한 녹색기후기금(GCF)이 ADB를 다자개발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 수행 이행기구’로 인증한 점을 언급,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개도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GC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日집권당, ‘역사·영토’ 홍보강화 요구…재외공관 신설 제언(5/28,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재생전략회의는 일본의 외교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일본 정부에 전할 예정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기에는 역사 인식, 영토에 관한 주장, 안보 정책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이 담겼으며, 구체적으로는 외무성 직원 증원과 재외공관 신설, ‘국익을 위해 싸울 사명감이 넘치는 외교관’을 육성하기 위해 연수 등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 등도 포함됨.
- 이 밖에 재외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 일본인 학교의 경비 강화, 방재 및 대테러 정책을 염두에 둔 정부개발원조(ODA) 확대도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달에 이들 제언을 정식으로 결정해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 **日정부, “세계유산등재 한국에 ‘타협제안’ 안했다”(5/29, 연합뉴스)**

-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타협 제안을 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지난 15일 ‘등재 권고안’에서 일본에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함.
-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인 7개 시설은 등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등재를 막지 못할 시 결정문에 강제노동 사실을 적시하거나 관련 시설에 기념비 설치나 영상물 제작 등의 타협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최종 등재 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일본 측이 등재 결정 이후 ‘전체 역사’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됨.
- 일본, “일본해, 확립된 표기” 동영상 7개 국어로 추가 배포(5/29,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이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라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로 추가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으며, 작년에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배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에 총 10개 버전으로 늘어남.
 - 여기에는 한국이 ‘일본해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문이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해가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된 만큼 한국의 제안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담겨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그간 영토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강조해왔으며 영상 추가 배포는 이 같은 방침의 연장선 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임.
- 한일,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시 한국동의 필요”(5/30,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가져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기로 함.
 -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함.
 - 양국 장관은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방식 등을 포함한 상호 군사적 관심사를 논의할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실무급 협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를 비롯한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다룰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며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는 또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지역 증원 파병 문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며 주일미군의 한반도 파병을 한미 양국 간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에 선을 그음.

■ 오카다 日민주당대표, “한일 비협력 손실 커…우선 정상 만나야”(5/31, 연합뉴스)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61·岡田克也) 대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한일이 협력하지 못하는데 따른 손실이 막대하다며 양국 정상에 “우선 만나야 한다”고 말함.
- 오카다 대표는 “이웃나라이자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시아를 견인할 경제력을 가진 양국이 협력하지 않는데 따른 손실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무조건 만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노력해야겠지만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한국도 의지를 갖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함.
- 오카다 대표는 조선 강제병합 100주년인 2010년, 조선병합의 강제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의 담화(일명 간 담화) 발표에 외무상으로서 깊이 관여하는 등 민주당 정권 시절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국회에서 아베 총리 역사인식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함.
- 과거사와 연결된 한일관계의 미묘함을 이해하고, 역사인식 문제에서 아베 총리와 각을 세워온 오카다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촉구한 것은 한일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일본 내 중도 성향 지한파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됨.

■ 한일 경제·금융이외 안보협력 공감대…‘투트랙’ 외교 가속(5/31, 연합뉴스)

- 과거사를 비롯한 갈등으로 경색 국면을 이어가던 한일관계가 안보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개선의 물꼬를 틀지 주목되는데, 한일 양국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에 합의함.

- 양국 장관은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양측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군사적 현안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지속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함.
- 한일간 뿌리 깊은 과거사·영토 갈등과는 별개로 안보, 경제 등 다른 분야의 협력은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투트랙’ 기조가 현실화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겨냥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며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힘을 쏟는 것도 한일간 안보 협력을 견인하는 요인임.
- 그러나 한일간 안보 분야의 교류·협력이 한일관계 개선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국제관계에서 안보는 대표적인 경성(硬性) 분야인데다 일제 강점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 한일관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임.
-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했으나 한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번 회담에서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요구에도 한 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은 데서도 이 같은 점이 드러남.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위안부·아베담화·세계유산, 한일관계 포인트”(5/31, 연합뉴스)

-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과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 8월 종전 70주년 계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담화(아베 담화) 등 3가지를 향후 한일관계 개선 측면에서의 중요 포인트로 지적함.
-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서 어떤 진전을 도출할 수 있을지, 6월말~7월초 결정될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8월 중순에 있을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이 어떻게 될지 등 이들 세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말함.
- 이는 한일 정상회담 등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본 측이 이들 3가지 문제에서 성의와 진정한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日언론, “한일국방회담 긍정평가…본격협력은 불투명”(5/31,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4년 만에 30일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일간 국방 분야의 본격 협력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봄.
 -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군사적 협력이 크게 전진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각료 회담이 실현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고, 이어 그러나 양국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에 진전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두 협정은 양국에 장점이 크다”며 “한국은 대국적인 관점에 서서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 양측이 방위교류를 재개하기로 한데 대해 니혼게이지신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국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미국의 지지도 기여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에는 일본과의 본격적인 방위 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어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내다봄.
 - 교도통신도 “한국이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개최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라고 분석함.

라. 한·러 관계

- **한국-러시아, 재정협력 양해각서…재정·경제교류 강화(5/29,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다음 달 1일 재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위해 방문규 2차관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전함.
 - MOU는 러시아의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중기재정계획수립과 성과 관리 등 선진예산편성기법, 국고관리 등을 위한 전문 기술진 교류와 재정 당국자의 상호 방문 등을 담고 있음.
 - 방 차관은 러시아 방문 기간에 러시아 관계자들과 유엔, 세계은행(WB)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브레인(dBrain)’의 수출 방안을 협의하고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을 방문할 예정임.

-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한반도중단철도, 北고위층 긍정적”(5/29,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28일 “한반도 중단철도 사업에 대해 북한의 철도 담당 기관 이상, 상위 수준에서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반도 중단철도가 재건되면 남·북은 물론, 러시아·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
 - 야쿠닌 사장은 “러시아가 나진~하산 철도망을 깔고, 나진항 터미널을 짓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자금투입이 없다”고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으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일본 사업가들과 협상도 했다”고 말함.
 - 한편, 야쿠닌 사장은 우리나라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국가의 철도협력기구 인 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문제에 “만장일치로 가입승인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 안전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면서도 “한국의 가입은 시간문제고,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힘.

마. 미·중 관계

- ‘아세안 후견인’ 나선 미국 일본…끓어오르는 남중국해 분쟁(5/26, 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의 갈등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을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동남아 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겪는 중국 견제용으로 풀이됨.
 - 로이터 통신은 볼테르 가르민 필리핀 국방장관이 27일 하와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함.
- 中 국방백서에 美 우려 고조…주말 아시아안보회의 격돌(5/26, 연합뉴스)
 - 중국의 국방백서를 둘러싸고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구체적 대응을 삼가면서도

중국의 새 군사전략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염려를 숨기지 않고 있음.

- 특히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관련국 국방장관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중국에서는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참석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할 예정인데다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대부분 자리를 함께 하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 중국, “남중국해 인공섬 막으면 미국과 전쟁도 불사”(5/27, 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관영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실을 통해 내비침.
-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만약 미국의 마지노선(bottom line)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inevitable)”이라고 함.
- 중국군은 “일부 역외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상·상공에서 저공 정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으며,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적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

■ 미국, “인공섬 건설 중단해야”…중국, “도발 언행 중단해야”(5/28,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간척 사업에 대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이어 그는 분쟁 지역에서 더 이상의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주변 지역에 형성된 공감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함.
- 또 미국의 정찰·초계에 대한 중국의 항의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미국은 다른 나라가 중국 섬을 불법 점거해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아무 말 않고, 중국이 주권 범위에서 정상적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이러쿵저러쿵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중 잣대에 습관이 든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함.

- 美 SEC, 中 사정작업 사령탑 왕치산 ‘간접’ 조사(5/28, 연합뉴스)
 -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채이스의 중국 고위층 자제 특혜 채용 혐의를 조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창끝이 중국의 사정작업 사령탑인 왕치산(王岐山)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당 서열 6위)에까지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SEC가 지난달 29일 조사 대상인 JP모건에 발부한 소환장에는 중국의 사정과 감찰을 총괄하는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왕치산 서기 이름을 필두로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에너지업계 거물 푸청위(傅成玉) 중국석유 화공(SINOPEC) 전 회장 등 35명의 명단이 들어있다고 전해짐.
 - SEC는 현재 가오 부장이 JP모건에 아들 가오췌(高珏) 취직을 청탁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사법당국도 JP모건 UBS, 인베스틱 등을 상대로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 그러나 미 당국은 왕 서기나 가오 부장 등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 또 이들의 JP모건 등 불법행위 관련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미국이 왕 서기를 지목, 간접 조사에 나섬에 따라 미·중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美·中 패권 경쟁 가열…곳곳서 대립과 충돌(5/29, 연합뉴스)
 -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등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방백서를 통해 방어 위주 전략을 공격·방어 겸비 해군력을 강화하며 작전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섬.
 -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계기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중앙아·동남아에 이어 남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AIIB에 57개국을 참여시키는 기염을 토함.
 - 또한 중국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 온 모디 인도 총리의 방중도 성사시켰으며, 이를 위해 인도에 220억 달러(약 23조9천억원)에 이르는 협력 패키지를 제공기로 함.
 - 미국은 동맹국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을 서두르고 중국인들에 대해 산업스파이, 채용특혜 비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중국, 리커창 총리 남미 순방 통해 ‘일대일로’ 확장(5/29, 연합뉴스)
 - 중국이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남미 순방을 통해 70건에 가까운 대규모 계약과 협정을 체결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범위를 대폭 확장함.
 - 리 총리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4개국, 5개 도시를 돌면서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비롯해 대규모 계약 체결, 강연, 현지시찰 등 일정을 소화했는데, 브라질과는 35건, 58조 원에 달하는 계약과 협정을 체결함.
 - 리 총리의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은 남미대륙의 상호연결·소통과 물류채널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3X3’식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의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를 남미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옴.
 -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중남미 4개국을 방문한 데 이어 리 총리가 1년이 채 안 돼 또다시 방문하는 등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와의 협력 강화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담겼다는 평가가 나옴.
- 미국, “남중국해 정찰계속”...중국 “도발 중단해야”(5/29, 연합뉴스)
 -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정찰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연일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고, 중국은 미국 측에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음.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가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전투기, 선박을 이용한 남중국해 정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의 이러한 정찰 활동에 중국이 “도발 행위”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 정찰은 수년간 계속 해오던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이고, 이어 그는 “지역의 현상

-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중국 측의 행위를 비난함.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말하는 ‘기존 현상’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말하는 현상이 1970년대 이후 필리핀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레틀리 제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를 점령하고 대규모 건설 활동을 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불법행위는 합법적 권리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함.

■ 매케인 의원, 중국과 영유권 분쟁 동남아에 군사지원법 발의(5/30,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 정치이자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규모 군사지원을 하자고 발의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됨.
- 매케인 의원은 ‘남중국해 이니셔티브’로 명명한 2016년 미국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군사장비와 보급, 훈련, 소규모 군사시설 건설’ 명목으로 향후 5년간 4억 2천 500만 달러(약 4천714억 원)를 제공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초당파적인 지지에 힘입어 찬성 22, 반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함.
- 개정안은 나중에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정식으로 성립됨.

■ 주미 중국대사, “美, 동아시아판 냉전 조성하나” 강력 비난(5/30, 연합뉴스)

-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미국은 동아시아판 냉전을 재연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을 강력히 비난했는데,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주 의외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과잉반응을 보이며 (남중국해)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행위는 중국 안에서 매우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함.
- 이어 “도대체 미국의 진실한 의도가 무엇인가. 미국은 동아시아판 냉전을 재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그는 최근 미국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떠나자마자 대중공세를 강화했다고 거론하며 “미군이 (중국을) 도발하고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추이 대사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동맹 강화행보에도 직격탄을 날렸는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동맹 구축)은 본질적 의미에서 모두 반중국적”이라며 “이런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예상치 못한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함.
 - 중국의 고위급 관료가 ‘동아시아관 냉전 재연’,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등의 표현을 동원해 미국의 대중 포위를 비난한 것은 보기 드문 일로, 이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대결구도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미 국방부, “남중국해 中무기반입 확인”...미일 vs 중 ‘인공섬 설전’(5/30, 연합뉴스)
- 중국이 이 해역에 건설 중인 인공섬에 무기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중국의 군 수뇌부 간 신경전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름.
 - 스티브 워런 美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의 인공섬으로 무기를 반입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그는 기자들에게 “인공섬의 군사화에는 당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의 무기 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중국이 인공섬에 반입한 무기의 종류가 무엇이고, 해당 무기가 아직 섬 안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음.
 - 이와 관련,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남중국해 분쟁에서 군사적 해결은 안 된다. 지금은 모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련국들이 ‘남중국해행동강령(COC)’을 체결하라고 촉구함.
 - 반면,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중인 중국 군사과학원 소속 자오샤오궈(趙小卓) 대교 (대령과 준장사이의 계급)는 카터 장관의 연설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카터 장관의 비난이 근거 없고 비건설적”이고 “중국의 행동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당하다”라며 반박함.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美-中 ‘안개 속 줄다리기’ 팽팽(5/31,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은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

양상을 노출함.

-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상그릴라 대화의 ‘단골 메뉴’이며 미국과 중국은 이 회의를 자국 입장 옹호와 상대국 비난의 장으로 활용해왔는데, 올해는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의 인공섬에 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공식 확인돼 양국의 설전이 더 악화됨.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에 대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또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간척 사업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남중국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향해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며 남중국해에서 자국이 행하고 있는 활동이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그는 나아가 중국이 “국방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외에 해상 수색 및 구조, 재난 예방, 해양 과학 연구, 기상 관측, 환경 보호, 향해 안전, 어업 보호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함.
 - 다만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시도했으나 과격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국제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비난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지는 않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함.
-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美비난에 中, “美, 이간질로 불화조성”(5/31, 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인공섬 조성을 비난한 미국에 대해 자국의 활동이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미국이 중간에서 간섭해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함.
 -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일부 섬과 산호초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인력의 작업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해왔다”고 말하고, 또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그 지역에서 중국의 해상 및 항공 안전에 위협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의 인공섬 조성 작업이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한다며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임.

- 화 대변인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6가지 입장도 정리해 발표했는데, 그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권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공섬 건설을 통해 강화시킬 필요가 없고, 중국의 건설 활동은 주권 범위의 합리적인 조치로, 군사 방어적 수요 외에 민간 수요 및 서비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며, 각국이 항해·비행의 자유를 핑계 삼아 연안국의 주권과, 권리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펴냄.
- 이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미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을 향해 “영토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중미 관계를 훼손시키는 모든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바. 미·일 관계

- **일자위대, 미국·호주 정례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첫 참가(5/26,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가 7월 7~21일에 열릴 미국과 호주의 정례 연합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에 올해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일본 육상자위대 관계자는 이 훈련의 목적이 수륙양용 작전에 관한 전술 기량을 향상하고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며 3국 연합 훈련은 없을 것이라고 전함.
 - 자위대가 탈리스만 세이버에 참가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및 적극적 평화주의 구상에 따라 미군과 자위대가 제3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것과 동시에 중국의 군비 확충과 해양진출 정책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는 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아베 총리, “자위대 해외 파견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5/2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와 관련한 자위대 파견의 판단 기준으로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위대의 능력·장비·경험에 입각한 역할을 하며, 그 전제로 외교노력을 다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함.
 - 그는 미군 등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하는 ‘중요 영향사태(주변 유사사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임박할 경우에, 분쟁 당사자의

의사와 능력, 유사사태에 대처하는 미군과 외국 군대의 활동 내용, 일본에 전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내놓음.

-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의 요코바타케 유스케 장관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력행사의 신 3요건’에 포함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 범위에 대해 “상대국의 무력공격과 같은 정도의 자위행동이 허용되는 국제법상의 ‘균형성’은 아니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라고 설명함.

■ 미국·일본·호주 ‘남중국해 매립’ 중국 압박(5/31,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여는 등 미국·일본·호주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협공 전선을 강화하고 있음.
- 3국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에 의한 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모든 당사국에 대해 자제, 매립활동을 중지, 긴장완화 조치 강구, 도발 행위 자제를 촉구하고, 또 국제법에 따라 주장을 명확히 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국가와 중국이 남중국해에 관한 실효적 행동규범을 빨리 합의하라고 요구함.
- 성명은 전체적으로 아세안 측과 중국 양쪽을 모두 거론했으나, 중국을 특정한 후 매립행위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맥락상 미국, 일본, 호주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손을 잡은 결과물로 보임.

사. 미·러 관계

■ 10만 명 정보유출 미 국세청 해킹, 러시아 해커 소행인 듯(5/28, 연합뉴스)

- 최근 발생한 미국 연방 국세청(IRS)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사건의 범인으로 러시아 해커들이 지목되고 있다고 미 CNN이 보도했으며, “해킹이 러시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국세청이 믿고 있다”고 전함.

- 다만, 국세청은 “내부 범죄수사대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배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음.
 - 해커들은 약 20만 명의 계정에 접근을 시도해 그중 절반 정도인 10만4천 명의 계정을 뚫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약 1만5천 건, 5천만 달러(약 553억9천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중동서 ‘미국 주춤’ 틈 타 러시아 활동반경 넓혀(5/29,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이슬람국가(IS)’ 사태와 예멘 내전 등 중동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반면 1989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30년 가까이 중동 문제에 사실상 제3자였던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이 두드러짐.
 - 러시아와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동병상련’의 관계로 통상·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끈끈하게 협력해왔는데, 특히 2년간 이어진 이란 핵협상에서 두 나라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에 맞서 우의를 다짐.
 - 특히 IS가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하자 러시아는 흔쾌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라크로 판매하기로 했으며, 재정상황을 감안해 무기 대금을 바로 받지 않고 신용 판매한 것으로 알려짐.
 -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월 예멘의 시아파 반군에게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 러시아는 반군을 공급 중인 사우디의 입장을 고려해 기권함으로써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표결 전 사우디의 적극적인 설득에 러시아가 결의안 통과를 묵인, 미국과 사우디의 균열을 파고들었다는 후문이 있음.
- 푸틴 대통령, “미국의 사법권 남용”…FIFA 비리 수사 강하게 비난(5/28,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와 관련해 “자국의 사법권을 다른 나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함.
 - 그는 “이번 수사가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의 재선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국제기구의 운영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함.
 - FIFA 수사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번 스캔들이 그렇잖아도 심각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매케인 의원, “미군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FIFA 해체 마땅”(5/31, 연합뉴스)
 -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유력주자로 강경파인 미국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이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지목된 제프 블라터 회장 체제의 국제축구연맹(FIFA)에 대해 초강수를 꺼내둬.
 - 상원군사위원장인 매케인 의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스위스에서 FIFA 간부 몇 명을 미 법무부가 체포한 것은 불충분하다며 미군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FIFA를 해체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 FIFA 정책이 “취약하고 비효과적인 것”이라고 비난한 뒤, “힘박에 모르는 FIFA에 대해 미군의 복수와 분노를 맛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FIFA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늦어도 한창 늦은 느낌이 있다”면서 FIFA가 경이로운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백악관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임.
 - 앞서 매케인 등 미 민주·공화 양당 중진 상원의원 13명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한 러시아가 2018년 월드컵을 개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에 개최지 변경을 촉구함.

아. 중·일 관계

- 日정부, “중국방백서의 日전후체제 탈피 지적은 틀려”(5/26, 연합뉴스)
 - 중국 국방백서가 26일 일본이 전후체제(2차 대전의 결과로서 형성된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를 탈피하려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전혀 맞지 않다”며 반발함.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시도’를 안보 위협 요인의 맥락에서 거론한 중국 국방백서 내용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우리나라는 전후 70년간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걸어왔다는 점은 여러 나라가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함.
 - 중국 국방부는 이날 2015년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이 다원화하고 복잡한 안보위협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으며 외부의 저항과 도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시도 및 군사안보 정책의 대규모 조정을 거론함.

- 중국도 ‘日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강력한 저지 활동(5/28, 연합뉴스)
 -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 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도 이에 대해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 장핑(張平) 부주임 등은 2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새누리당) 위원장과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만나 일제 징용시설의 문화유산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위원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함.
 - 나 위원장은 이날 특과원 모임에서 “중국은 우리보다 입장이 더 완고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한 입장”이라며 “한국은 등재를 반대하고 굳이 (등재를) 한다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라는 입장인데, 중국은 아예 반대 입장”이라고 전함.
- 중국, ‘국방백서’ 발표 후 첫 센카쿠 해역 순찰(5/28, 연합뉴스)
 - 중국이 올해 국방백서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尖閣·중국어명 дя오위다오<釣魚島>) 해역 순찰에 나섬.
 -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 해경선 2401호, 2151호, 2306호 편대가 дя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 항해를 하고 있다”고 전함.
 - 앞서 중국군은 지난 26일 ‘2015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며 “국가 주권과 안전, 국가 해양권의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日, 남중국해에서 무력사용 노리나…아베정권 모호한 답변(5/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동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당하면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시사 한 가운데 남중국해가 봉쇄됐을 때는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28일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등 관련 법안을 둘러싼 야당 의원과 아베 총리 등 내각 구성원 사이의 질의응답에서 아베 총리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자위대의 기뢰제거 활동 범위에 관해 “현재 염두에 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사례”라는 뜻을 밝혔으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조건을 댔.

-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돼 일본으로의 원유 수송이 차단되고 이 때문에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되면 자위대를 파견해 이를 제거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임.
-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해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범위에 남중국해가 포함될지도 초점이 되었는데, 에다 겐지(江田憲司) 유신당 의원이 이에 관해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나, 인도양이나...어딘지 말해 달라”고 따지자 아베 총리는 “지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함.
-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쓰거나 미군의 후방지원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남긴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일본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거둬 반대(5/29,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과 한국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고 이런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일본이 일제 당시 강제노동 장소가 포함된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거둬 반대 입장을 밝힘.
- 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일본이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함.

■ 일본, 필리핀에 방위장비 공급 추진...중국 견제(5/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도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위한 교섭 개시에 합의할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필리핀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레이더 기술이나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등을 필리핀에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정 체결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협정에는 방위장비의

이전을 결정하는 절차나 제3국 이전이 금지된다는 원칙 등이 명기될 것으로 알려짐.

-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이 필리핀에 방위장비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임.

자. 중·러 관계

- 러시아-중국 안보협의회...서방 간섭·제재 공동 대응 합의(5/26,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은 모스크바에서 제11차 전략안보 협의회를 열고 서방의 일방적 민주주의 이식 시도와 내정 간섭, 경제 제재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해 대(對)서방 대결 공조 노선을 거듭 확인했다고 전함.
 - 회의에는 러시아 측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중국 측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참석함.
 - 회의에서 양측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옛 소련권 국가와 중동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방식 민주주의 확산 정책과 정권 교체 시도 등을 겨냥해 비판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서방의 압박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난함.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농민시장 상설 장마당으로 확대(5/28, 자유아시아방송)
 -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3번만 열리게 되어 있던 북한의 군단위급 농민시장이 상설 장마당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임.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함경북도 주민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로써 한 달에 3번만 열리는 기존의 농민시장은 농촌의 리 단위 이하 시골에만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 리 급 단위에서만 개장되는 소규모 농민시장은 매월 1일, 11일, 21일 3번 열리며 31일은 건너뛰고 다음달 1일에 개장된다는 것임.
 - 소식통은 또 “농민시장이 열리는 날은 농촌에서는 공식적인 휴식일을 겸한다”고 설명했다.
 - 도시에서는 한 달에 4번 휴식일이 있지만 농촌은 이보다 하루가 적은 3번이 휴식일인 셈임.
 - 소식통은 이어서 “군 단위 이상의 농민시장이 상설 장마당으로 확대된 시점은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딱히 언제부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아주 일찍 시작된 곳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역도 있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주민소식통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군 급 지역에서 농민시장이 장마당으로 변한 곳을 살펴보면 그 규모 면에서는 대도시 장마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고 증언했음.
 - “아직은 장마당으로써의 모양새도 갖추지 못해 ‘농민시장’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농촌 장마당도 적지 않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한편 군 단위 농민시장이 상설 장마당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인근 도시 상인들의 영업 활동 범위가 한층 넓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들은 “도시 상인들이 농촌 장마당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도매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자전거에 싣고 달리는 자전거 달리기(장사꾼)도 많이 등장했다”고 입을 모았음.
 - 또한 군 단위의 농촌 장마당에서는 도시 장마당에 비해 북한 화폐로 거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 “北 해외근로자 대북송금 차단…인권압박 강화”(5/28, 동아닷컴)
 - 한미일 3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죄기로 했음.
 - 북한이 ‘탐색적 대화’를 갖자는 5자(한-미-중-일-러)의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한 데 따른 조치임.
 - 특히 3국은 북한 해외 근로자의 대북 송금 동결,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 압박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협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이같이 조율했음.
 - 황 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일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도발 억제에 대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음.
 - 성 김 대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음.
 - 황 본부장은 앞으로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달 중순 방한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 이에 따라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대북 송금 동결 방식에 대한 검토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도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권을 언제든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합의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길도 열어 놓았음.
 - 성 김 대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외교적 노력을 모두 거부해 대북 압박 강화 이외의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음.
 - 하지만 자국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에 미온적임.
 - 중국은 한미일과의 협이가 ‘북한 봉쇄’로 비치는 것도 마뜩잖아 함.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미 대표를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임.

- 유엔보고서 ‘북한 영양부족 주민 수 1천만 명 넘어’(5/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영양부족 상태인 주민 수가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음.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27일 공동 발표한 ‘2015 세계의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영양 부족 상태인 북한 주민 수를 1천50만 명으로 추산했음.
 -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북한 주민의 41.6%에 해당된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또 북한의 영양부족 주민수가 1990년대 초반 4백80만 명에서 2000년대 초반 8백70만 명, 그리고 2010년대 중반인 현재 1천5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2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음.

- 북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선전포고로 간주”(5/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29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가 추진되는 것을 두고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했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끝끝내 설치된다면 공공연한 대결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조평통은 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남한과 미국이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음.
 - 이어 “인권사무소 설치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해 써오는 상투적인 수법이며 침략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라며 “괴뢰역적 패당은 상전을 등에 업고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하려 한다”고 헐뜯었음.
 - 조평통은 남한 당국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최근 6·15 공동행사와 남북 대화 등에 관심을 표시하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난해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음.
 - 조평통은 “서울에 ‘북인권사무소’ 문패가 달리는 순간부터 박근혜 일당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백두산 총대의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되어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이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적대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은 설사 유엔의 모자를 쓴 자들이라고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불소나기를 피할 수

없다”며 “적대 세력의 도발이 노골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대응 강도는 천백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북한 인권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6월 개소…국내 北인권논의 진전되나(5/26, 아시아투데이)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한 협정 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중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공식 개소할 전망이며 이와 맞물려 장기 정체돼 있는 국내 ‘북한인권법’ 논의에도 진전이 나타날지 주목됨.
 -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우리 정부는 지난주 교환각서 서명을 완료해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
 - 정부는 교환각서 서명에 앞서 유엔 측과 각서 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
 - 다만 양측은 우리 정부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 특권면제협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자는 “특권면제협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추후 합의해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며 “계획대로 6월 중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 또 양측이 서명한 교환각서에는 북한인권사무소 측의 증인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인사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측도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일각에서는 이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와 함께 국회에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논의도 다음 달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강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
 - 패스트트랙은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외통위원 23명 중 새누리당은 14명이라 패스트트랙이 가능함.

-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음 달 총력전을 걸어오고,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서울로 쏠리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북한인권법 논의에 또다시 제동을 걸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 앞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지난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 “유럽, 북 인권 탄압자 처벌 노력해야”(5/27,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 20여 개국의 종교적 자유실태를 조사한 보고서(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World Report 2014-in Prison for their Religion or Beliefs) 발표회가 26일 저녁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열렸음.
 - 브뤼셀의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의 알피아즈 바이야(Alfiyaz Vaiya) 공보담당은 27일 북한을 포함한 20여 개국의 종교자유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권고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음.
 - 브뤼셀의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이 올해로 세 번째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계속될 경우 유럽연합은 자체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했음.
 - 보고서는 또 중국은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협약에 의거해 자국 내 탈북자를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영국 런던의 민간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의 간사인 탈북자 박지현 씨는 이날 보고서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상세히 기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출간 후에도 많은 이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음.
 - 박 간사는 27일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와 별도 만남을 갖고 향후 유럽의회 등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유럽연합이 북한 종교 자유는 물론 탈북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그는 덧붙였다.

- ‘北 인권문제’ 지렛대 삼아 대화 참여 유도(5/27, 세계일보)
 -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자 협의를 갖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이 이례적으로 공개돼 기존 경제 제재 이외에 향후 북한인권 문제가 대북 압박 수단으로 더욱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음.
 - 특히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에 들어갔음.
 - 성 김 특별대표와 황준국 본부장은 3자 협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됐음을 공개했음.
 - 김 특별대표는 “우리(한·미·일)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음.
 - 황 본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협의하게 됐고 우리가 맡는 일이 핵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 황 본부장은 “북한인권 문제는 6자회담 의제로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 회담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장외에서 북한인권 문제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됨.
 -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유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음.
 - 북한은 최악의 경우 ‘최고 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ICC 제소가 이뤄질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음.
 -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 대화 참여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임.
 -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핵 협상이 타결된)이란과 북한은 국제경제 체제와의 연계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의 중점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석유 수출국인 이란은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돼 있어 경제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폐쇄 경제인 북한은 경제 제재만으로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 다만 북한인권 문제를 고리로 하는 한·미·일의 대북 압박 구상이 다른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제3국의 인권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에도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인권 문제에 민감함.
 - 이에 따라 한·미·일 3자는 중·러가 동의할 수 있는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6자회담 틀 밖에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두 트랙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임.
- 러셀 미 차관보 “대북 인권개선 압박 유지할 것”(5/28, 미국의소리)
- 미국은 북한에 인권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 러셀 차관보는 27일 뉴욕의 미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다.
 - 특히 북한인권 상황을 ‘참혹함(horror)’로 표현하면서 이 문제를 조명하고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동반국들과 협력해 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 러셀 차관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인권 유린의 적나라한 실상이 그대로 담겼다고 지적했다.
 - 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고위급 다자 행사가 처음 열리고, 북한에 개탄스러운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화공세의 일환으로 지난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할 필요성을 느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반박하고 북한에는 인권유린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 러셀 차관보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그 목적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지하고 고대한다고 말했다.
 - 러셀 차관보는 또 이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다.
 - 미국은 북한 정부에 다가가 신뢰할만한 협상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 배가해 왔지만 협상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임.
-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확산활동을 저지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에 유용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을 적극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3. 탈북자

- 장애인 탈북자, 오슬로 자유포럼서 북한인권 고발(5/27, 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가 26일 노르웨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인권행사 ‘오슬로자유포럼’에서 북한인권 참상을 고발했음
 - 지 씨는 통역을 통해, 집권 김 씨 일가가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속였다고 말했음.
 - 김정일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지난 1990년대에도 곧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임.
 - 지 씨는 세계 각국의 인권 관련 인사들과 정부, 비정부 관계자들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24명의 연사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했음.
 - 지 씨는 14살이던 1996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쳐 파는 일을 하다가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고 말했음.
 - 지 씨는 당시 병원으로 실려가 수혈이나 진통제도 없이 다리와 팔을 잘라내던 끔찍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음.
 - 사고 이후 동생들이 구해 온 음식으로 연명하던 지 씨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오다가 공안에 붙잡혀 구타 등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음.
 - 지 씨는 특히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신을 더 가혹하게 다루는 북한 당국에 환멸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음.
 - 지 씨는 목발 하나에 의지해 중국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 이르는 1만km의 대장정에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말했음.

- 아울러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웠으며, 다시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음.
- 2006년 11월에 서울에 입국한 지 씨는 2010년에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나우'를 결성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나우는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어린이와 장애인, 여성 등 1백 명 이상을 구출했다고 지 씨는 밝혔음.
- 지 씨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음.

■ 런던서 '영국의 탈북자 정책' 조명(5/29,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오는 6월 18일 영국 '난민의 주'를 맞아 '영국에 사는 탈북자'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음.
- 이 단체의 펠리시티 스펜서-스미스(Felicity Spencer-Smith) 공보담당은 29일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영국 난민의 주라면서 영국이 전반적으로 어떤 난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난민 정책 적용 시 탈북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특히, 영국 런던의 뉴 몰든(New Malden)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행사는 처음이라면서 더욱 다양한 지역의 영국인들에게 북한을 알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 이 단체는 또 이 설명회에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뉴 몰든에 정착한 탈북자 강지영 씨가 나와 영국에서 탈북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단체는 학술회의에 영국 의회 정치인들, 인권 관련 학계 및 비정부기구 인사들이 참가할 계획이라면서, 북한인권 특히 영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 이 단체는 또 이날 '유럽 국가들의 난민 정책과 탈북자'라는 주제의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탈북자들이 난민 심사에서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했음.
-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한국과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 40-5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 파견, 인도주의 해외 원조 등 다양한 북한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인추협, 6.25참전유공자회와 국군포로 귀환 촉구(5/26, 아주경제)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6.25참전유공자회와 함께 5월 26일 동아일보사 앞 광장에서 6.25 전쟁 당시 납북된 국군 포로의 귀환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인추협은 6.25참전 유공자회와 고령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 정신적,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국군 포로 귀환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기다리는 세종시 6.25 참전유공자회의 노병 회원 80여명이 85세~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국군 포로 내 친구를 돌려다오’라는 외침으로 인추협과 함께 국군 포로 귀환 촉구 운동을 펼쳐 관심을 끌었음.
 - 인추협은 “6.25참전 유공자회와 함께 매주 화요일 동아일보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화요집회(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주최)가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군 포로 귀환 촉구 선언도 화요집회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대북지원

- 미 NGO, 북한에 옥수수 60t, 밀국수 10t 지원(5/27, 미국의소리)
 - 미국의 한인 대북 지원단체인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강냉이 60t과 밀국수 10t을 지원했음.
 - 이 단체의 윤유중 대표는 26일, 지난 3월 15일에는 밀국수를 5월 1일에는 강냉이를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음.
 - 특히 지난 2일 북한을 방문해 일주일 동안 머물며 식량이 어린이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음.
 - 이 단체는 1년에 두 차례씩 강냉이 60t과 밀국수 10t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음.
 - 강냉이는 중국 단둥에서 서포역을 거쳐 원산의 국수공장으로 전달됨.
 - 여기서 매달 10t씩 만들어지는 강냉이 국수는 강원도 인민병원과 문천시의 중등학교, 원산의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애육원, 육아원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이어 이번 방북 기간 중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북한 어린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달라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북한에 식량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물자를 전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일 축구공’ 500개를 지원했음.
- 미 선교단, 원산주민에 옥수수 지원(5/2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협동침례교단(CBF)의 글로벌 선교단 소속 윤유중 목사는 올 들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옥수수와 국수 등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음.
 - 미국의 한인 대북인도주의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델러스본부’의 대표이기도 한 윤 목사는 북한의 요청으로 7월 말 이후로 예정했던 지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 윤 목사는 북한에 특별히 옥수수를 지원하는 이유는 정말 식량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다른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북한 군대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방북 할 때마다 옥수수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 윤 목사는 1996년 이후 미국 침례교단의 지원을 받아 매년 북한에 식량과 소금, 발전기 등을 지원해왔다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지원 규모가 매년 평균 200만 달러 상당에 달했지만 최근 후원자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지원 규모가 매년 2, 3만 달러 정도밖에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지원 활동을 위해 북한을 24차례 방문했던 윤 목사는 북한 강원도 지역 어린이들에게 5년째 ‘통일 축구공’을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축구인 만큼 어린이들의 반응도 아주 좋다고 전했다.
- 유럽 인권단체 ‘국제사회 대북 식량 지원, 새 접근법 찾아야’(5/29, 미국의소리)
-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가 최근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 : 식량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규모 기아는 자연재해나 국제적인 제재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해 대북 식량 지원에 6천9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북한 지도부는 2012년과 2013년에 로켓 발사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김 씨 일가 축하 행사에 2억 달러, 스키장 등 사치시설 건설에 3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것임.
 -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지도부가 6백만 달러짜리 요트 같은 사치품 구매 등 낭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이렇게 낭비하는 자금으로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해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국제 원조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
 - 예를 들면,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내부감사에서 부적절한 분배감시, 국내여행 제한, 투명성 부족, 북한 정부의 전용에 대한 취약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다는 것임.

- 보고서는 이런 상황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음.
- 먼저 분배감시 없이는 원조도 없다는 유엔 원칙을 고수해 식량 분배와 소비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또 국제사회는 충분한 재원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당국을 통해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을 당국과 분리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엔 기구들은 유엔의 인권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등 지원에 따른 요구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8. 북한동향

- ‘北-유엔아동기금 기초협정 체결 및 기구활동 정식 참가(‘85. 5.25)’ 즈음 ‘기금의 협조로 5살미만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활동 전개’ 등 전언(5.25,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